데스크시각

박 진 현

미술관이 도시를 바꾼다

지난 1990년대 영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템스강 부둣가였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해상교통의 중심지였지만 수송형태의 변화로 기능을 상실하면서 런던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게다가 수십 년째 방치된 물류창고(현재의 런던 도크랜드 박물관)는 노숙자와 범죄자들의 아지트가 됐다.

유럽의 문화수도를 자부해온 런던으로서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급기야 영국은 지난 1998년 쇠락해가는 템스강 부둣가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심 리모델링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른바 '밀레니엄 프로젝트'다.

발전소가 미술관 변신

이 프로젝트의 첫 수술대상은 뱅크 사이드 화력발전소. 한때 런던 부흥의 터빈(turbine)이었지만 석유파동과 불황이 겹쳐 1981년 문 닫은 이후 템스강변의 '미운 오리새끼' 신세가 된 것이다.

런던은 당시 토니 블레어 총리가 제안한 'Creative Britain'(창의적인 영국만들기)'에 영감을 얻어 이곳을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필적하는, 세계적인 현대미술관으로 바꾸기로 하고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했다. 때마침 현대미술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준 영국은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였다.

이 공모에서 무명의 스위스 젊은 건축가 헤르조그와 드뮤론이 내로라하는 건축계의 거장들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들은 기존 화력발전소의 형태와 골격을 최대한 유지하되 내부를 확 뜯어고치는 신선한 설계로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스타트를 끊었다.

약 4년 동안 2억4천만 달러(2천8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이 발전소는 지난 2000년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그 유명한 '테이트 모던 갤러리'다. 차별화된 컬렉션을 갖춘 테이트 모던은 문을 열자마자 관광객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개관 이래 전 세계에서 약 2천만 명이 다녀갔다.

테이트 모던 이외에도 미술관을 매개로 우중충한 회색도시에서 컬러풀한 문화도시로 탈바꿈한 사례는 많다.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해 쇠락한 공업도시에서 일약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한 스페인의 빌바오 신화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고전(古典)이 됐다. 이에 고무된 일부 나라들은 루브르나 구겐하임 미술관의 분관 유치에 사활을 건, '미술관 전쟁(museum wars)'을 치르고 있다.

광주에서도 영국의 밀레니엄 프로젝트 못지 않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인 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은 소요예산(7천여억원)과 공사기간(5년)만을 떼어보면 테이트 모던과 비교가 되는 않는 규모다. 하지만, 그 성과는 미지수다.

현재 문광부가 내놓은 문화전당 계획안에 따르면 연구와 교육만 있을 뿐 향유와 관광은 없다. 이 때문에 3만5천 평의 '수퍼 전당'이 자칫 연구원들만 북적거리는 실험실(Lab)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박광태 광주시장이 동구 주민 간담회에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당 내에 국립 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감이 안 잡히는 '아카이브'나 '디지털 랩'보다는 눈에 보이는 미술관을 유치해 문화발전소로 키우겠다는 얘기다.

전당내 현대미술관 유치해야

이에 대해 문광부는 계획안에 다목적 전시관이 들어서는 만큼 별도의 미술관 건립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미술관은 수장고와 전문인력, 컬렉션 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설계단계부터 치밀한 기획과 사전준비가 전제돼야 한다.

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는 도심에 변변한 미술관 하나 없는 광주가 문화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문광부는 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단순한 장르 이기주의로 폄하해선 안 된다.

볼거리 없는 문화 인프라만큼 초라한 것도 없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는 전당에 사람들이 들끓지 않으면 큰 일 아닌가.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난 테이트 모던의 예는 더 이상 '먼 나라 동화'만은 아니다. 잘 지은 미술관 하나가 도시의 미래를 바꾸기 때문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박 행 순

미국교포사회의 결혼문화

미국에 살면서 삼십 중반을 바라보는 장남이 고맙게(?)도 짝을 찾았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주위 사람들은 신부가 한국여자이냐고 묻고들 하였다. 어떤 교포는 며느리가 여자이기만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건 괜찮다고도 했다. 이는 동성결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말을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더 이상 한인들끼리의 결혼을 고집할 수 없게 된 부모세대의 솔직한 심경인 듯했다. 다행히 내 며느리는 여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포이다.

결혼준비는 자연스럽게 사돈댁의 도움을 받으며 본인들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1년 전부터 은행에 공동구좌를 개설하고 결혼비용을 꼼꼼하게 계산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모아가는 것이었다. 원하는 것을 사라고 생일에 보낸 돈은 공동구좌에 들어갔다. 그 사이에 자기들끼리 조촐한 약혼절차가 있었다고 알렸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진행상황을 우리와 공유했다. 형의들러리가 된 둘째아들의 예복 칫수 재는 방법까지 사진설명과 함께 자세한 안내가 따랐다. 혼수 때문에 다투는 일은 전혀 없었다.

결혼 전날에는 8 페이지나 되는 시나리오에 따른 리허설이 있었고, 당일 결혼식은 포도밭을 배경으로 생화로 장식된 야외식장에서 치러졌다. 세 쌍의 들러리들이 짝을 지어 들어와서 주례의 양쪽으로 섰다. 이어서 신부가 아버지의 팔을 끼고 들어오는 것은 낯익은 풍경이었다.

피로연에서는 신랑 신부의 어릴 적 모습들이 영상으로 소개되었고, 신랑 신부는 그간 연습한 춤 솜씨로 하객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측면으로는 번쩍이는 인공조명을, 그리고 위로부터는 은은한 달빛 조명을 함께 받으며 모두 무대에 나와 춤을 추었다. 오후 5시에 전혀 급할 것 없이 조용하고 진지하게 진행되는 결혼식과, 느긋하게 먹고 마시며 춤추고 담소하는 피로연은 우리 예식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며느리는 영어로 'daughter in law'라고 한다. 딸은 딸인데 법으로 맺어진 딸이다. 딸이 없는 내게 며느리는 친딸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에게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나는 오늘 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는 법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Daughter in Law가 아니라 Daughter in Love입니다"라고 말했다. 하객들은 모두 새로운 단어에 박수를 보냈다.

다음날, 신랑신부는 사모관대와 원삼족두리 차림으로 양가 어른들께 폐백을 드렸다. 한인교포들은 미국사회에 뿌리내리고 살면서 서양의 축제분위기와 우리의 전통이 공존하는 독특한 결혼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호화스럽다거나 사치스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비용은 아끼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미국사회를 흔히 다양한 문화를 녹이는 '용광로'라고도 하지만 과일, 야채, 달걀과 햄이 어우러진 '샐러드'로도 표현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전남대 약학대학 교수·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장· 2005년 10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 입니다.

기 고

박 희 만

'내신만점' 파문 유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의 일부 사립대가 2008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4등급(또는 3등급)까지 만점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8년 대학입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학교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 시킨 횡포 공교육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4등급이면 전체학생의 40%에 해당하는데, 이를 똑같이 만점처리 하겠다니, 이같은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궁금하며, 대학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내신은 본고사가 폐지 된 후, 학교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같은 등급은 동일한 점수로 보자는 국민 서로간의 약속 이었으며, 그것이 30년 이상 지켜져, 공감대가 굳어진 불문율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 즉 학생부에는 '실질반영비율'이라는 말이 늘 따라다닌다. 2007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의 주요대학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보면, 소위 일류 대학의 경우 입시총점의 3%미만을 적용하였고, 그밖에 4-8%만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았다. 대학이 학생부를 입시총점의 50% 반영한다고 약속했으면 그것을 지켜야지, 무슨 해괴한 '실질반영비율' 이라는 말을 만들어 수험생을 기만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것은 마치 100m 달리기 경기를 한다고 발표해놓고, 90m 선상에서 출발하여 10m만 달린 기록을, 100m 달리기 기록으로 간주하는 꼴이다.

이번 내신 파문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여, 문제를 일으킨 대학들이 잠시 뒤로 물러선 듯하다. 이는 교육부인적자원부를 비롯한 6개 부처가 BK21사업 등 1조 5천억의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 서둘러 자체 진화에 나선 듯 하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각 대학에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공개 토록하고, 이에 따라 재정지원을 반드시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내신 1·2등급을 묶어 상위 11%까지 만점을 주기로 한 입장을 강행한다는데, 내신 9등급제를 8등급제로 바꾸니 이 또한 교육부 원칙을 무시한 처사여서, 비난과 재정제재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신입생 선발 방법을 어떻게 달리하든 우수한 학생은 소위 일류라 불리는 대학으로 모이기 마련이다. 일부 대학은 무엇 때문에 내신을 무력화 시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지 유감스러울 뿐이다. 대학은 신입생 선발 방법에만 몰두하지 말고, 선발한 학생들을 어떻게 잘 가르쳐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온힘을 쏟기 바란다. 즉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대학의 에너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대학은 고등학교에 끝없는 경쟁을 강요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골병' 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전남도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교통카드 충전소 영수증 발급기 필수적으로 설치했으면

교통카드를 충전 시키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 충전을 시킨 뒤 영수증을 요구하면 '안된다'고 하고 충전을 시켰는데도 버스를 탄 뒤 찍어보면 충전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을 보기도 했다. 얼마전 지하철역 인근에서 교통 카드를 충전 시킨 뒤 버스를 탔는데 충전하기 전 요금과 똑같은 것을 발견했다.

영수증이라도 있으면 충전했다는 증거로 제시할텐데 이마저 없어 재충전을 요구하기도 힘들다.

특히 버스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교통비 영수증이 필요할 때가 많다.

따라서 교통카드 충전소에 영수증 발급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했으면 한다.

각 충전소에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다록 하고 구청 등 자치단에서는 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 지도·감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박호암·인터넷독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소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식당의 경우 면적이 90평 이상으로, 시내에서 90평이상 되는 식당은 많지 않다.

광주 등 대도시에는 많겠지만 시·군·구 등 중소 규모 도시에는 적은 규모의 식당들이 훨씬 더 많다. 이 때문에 90평 이상의 크기를 가진 식당만 소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실효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소도시 읍내 식당에 한번 가보면 40~50평 정도 규모의 식당도 드물고 20~30평이나 10~20평짜리 식당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원산지 표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90평 이상 규정을 30평 이상으로 바꿔 적용해야 한다.

또 현재 소고기와 쌀로만 한정돼 있는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을 하루빨리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까지 확대해야 한다.

▲김점숙·나주시 노안면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사 설

서민 울리는 대부업 '횡포' 규제 서둘러라

대표적인 사금융인 대부업체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 허위·과장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뒤 고율의 이자부담, 가혹한 채권추심, 폭언과 폭력 등으로 이용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대부업의 허위·과장광고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대부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무이자 ○일' '누구나 대출 가능' '30분 내 대출 가능' 등으로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 제휴업체라고 속이는가 하면 심지어 대출자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신용도가 낮아지고 은행 등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까지 숨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로 서민들을 유혹한 후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다. 법정 금리 상한선인 연 66%를 훨씬 초과한 연 223%의 살인적인 이자를 물리는가 하면 과다한 선취수수료(선이자) 징수, 중도상환시 잔여기간 이자요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 같은 횡포로 서민들이 대부분인 고객 중 상당수는 경제적 파산자로 전락하고 있다.

대부업체는 광주에만 2천개가 넘을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사금융 시장 규모는 연 18조원에 이용자만도 330만명에 달한다. 누구나 대부업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은 엄청나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통을 단순히 그들 개인의 책임이나 시장논리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대부업의 허위·과장광고를 강력히 규제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 '선거 중립의무 위반' 존중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또 판시했다. 노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은 네 번째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7일에 이어 6월에만 두 번째 선거 중립의무 위반 판정을 받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 부분이다. 선관위는 지난 7일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이번에는 판단을 유보했다.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는 냉소적 표현을 사용한 점이나 "앞으로는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일일이 질의해 답변을 받겠다"는 등의 대목에서 불쾌감을 읽을 수 있다. 청와대는 나아가 선관위의 결정으로 오히려 국정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선출직 공직자나 다른 헌법기관이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선 정국은 조기 과열되고 있다. 대선 예비후보 검증공방이 격화되면서 폭로전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공방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그 공방의 중심에 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특정 정당이나 예비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대통령은 어느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사이버 온난화

컴퓨터의 태동은 '계산'에서 비롯됐다. 인류 삶에서 계산이라는 개념은 자연스레 생겨났고, 처음 손가락 등을 활용하다 5천년 전부터 주판을 고안해 내 사용해 왔다.

생활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보다 정밀하고 큰 단위의 계산이 필요하게 돼 300여년 전 컴퓨터라는 것을 만들어 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는 국세기관 등에서 몇몇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신기한 기계였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후반 개인용 컴퓨터로 발전, 오늘에 이른다.

진공관을 논리소자로 하던 1세대 컴퓨터도 신기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2세대 트랜지스터를 거쳐 3세대 집적회로로 진화하더니 어느 사이 4세대 고밀도 집적회로, 5세대 초고밀도 집적회로로 거듭나고 있다. 인공지능까지 추가됐으니 향후 어디까지 발전할 지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가운데 그 편리성에 가려 간과됐던 '컴퓨터 환경 오염' 문제가 지구촌의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정보기술조사기업인 영국의 가트너는 컴퓨터가 온실가스를 배출해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가트너는 "컴퓨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3천500만t에 이르며, 영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100만대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PC 1대를 생산하려면 1.8t의 화학성분과 화석연료, 물이 필요하고 작동 과정에서 연간 0.1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또 3년 정도 사용된 후 버려져 카드뮴과 수은으로 땅을 오염시킨다.

영국 정부는 온난화의 또 다른 주범인 정보기술 장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녹색정보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정보기술 사용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 각료들의 걱정이 반영된 것이다.

편리성 추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이버 온난화' 방지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부분이지 싶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사 업 2 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